세종정책연구 2020-07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양운철 지음

세종연구소

저자 약력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근 주요 연구】

양운철. 2021.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경제 부문 분석." 『세종정책브리핑』. 2021-01.

공저. 2020. 『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 역사공간.

양운철. 2020.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 『세종정책브리핑』. 2020-13.

양운철. 2020.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정책브리핑』. 2020-06.

공저. 2019.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추정한 한·중·일 3국의 정체성." 『응용통계연구』. 32권 3호.

양운철. 2019. "북한상품의 국산화: 자력갱생과 수입대체의 연계." 『세종정책연구』. 2019-03.

편저. 2019. Un-Chul Yang. "Unavoidabl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From Self-reliance to Symbiosis." in Un-Chul Yang edited *North Korea Conundrum*, The Sejong Institute.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2021년 2월 15일 발행

지 음 | 양 운 철
발행인 | 백 학 순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전화 | (031) 750-7615
팩스 | (031) 754-0100
홈페이지 | www.sejong.org
등 록 | 2001년 1월 19일 제1-26호
ISBN | 978-89-7429-743-5 (95340)

※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문 5

Ⅰ. 통일 초기 구동독 지역 경제 현황 7

Ⅱ.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과 제약 13

1.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 15
2. 구동독 지역의 성장 제약 요인 18
3. 동서독 경제 차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21

Ⅲ. 동서독 경제 격차 원인과 감소 정책 25

1. 노동생산성과 소득수렴 25
2.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와 노령화 30
3. 동독지역의 재산업화 정책 32
4.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증대 34
5. 수출 증가로 인한 동독지역의 발전 38

Ⅳ. 통일 한국에의 시사점 43

1. 통일 초기 대응의 중요성 46
2. 통일 대비 충분한 재원확보 47
3. 왜곡된 산업 구조 개선과 인력 재배치 51

Ⅴ. 맺는말 53

참고문헌 55

요 약 문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독일경제는 통일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동서독의 소득격차도 감소했다. 그러나 동독 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서독 지역보다 낮아 동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베를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독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이 서독 대비 크게 낮은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후유증, 부족한 인적자본, 인구 감소, 경쟁력 있는 기업 부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사회보장이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점도 동서독 경제 격차의 한 원인이다.

낙후된 동독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동독의 특정 지역을 집중 발전지역으로 선정하여 투자와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beacon region'으로 불리기도 하는 Leipzig와 같은 선도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독 지역의 많은 기업이 중점 도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연결 고리를 구축하여 더욱 현지화된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R&D 지출은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로 실현되었다.

구동독 지역이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다른 이유로는 지역 내 기업의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EU가 출범하면서 경

쟁력 있는 독일 상품은 유로존 내에서 유로화로 수출하게 되어,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 조정 없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동독의 수출증가율은 서독의 2003년 수준과 유사하며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약 2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상품 생산의 수출증가율은 약 3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독 지역 내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시나 주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동독 지역이 수출 중시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경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동서독이 분단되었던 시절보다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의 충격은 독일 사례보다 클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인구 비율도 독일보다 크기 때문에 통일시 소요되는 1인당 비용도 독일 경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한 연구는 실제 구동독 지역에서 젊은 계층은 경제외적인 이유로도 서독으로 이주했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동독 내에서의 이동과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지역 내에서 이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에 합당한 산업구조를 선별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한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압축성장을 통한 발전전략이 성공한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Ⅰ. 독일통일 초기 구동독 지역 경제 현황

1990년 이루어진 독일통일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동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독으로 흡수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독일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와 용기,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 서독의 축적된 통일 준비 노력, 국제사회의 지원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동유럽에서는 큰 변혁의 바람이 불었다. 1989년 6월 폴란드에서는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미 1989년 4월의 라이프치히 월요 평화시위 이후 계속되었던 동독의 민주화 운동은 더욱 강력한 시위로 발전하였다. 계속되는 시위로 공산당의 통제력은 약화하였고 뉴포럼, 민주부흥, 사민당 등 반정부 성향의 재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개방의 기수로 인식되던 고르바초프가 동독 정권 수립 40주년의 기념식 참석차 1989년 10월 6~7 양일간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동독 전역에 시위가 확산되었다.[1] 7월 28일에는 헝가리 민주정부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경계선이던 철조망을 제거하였다. 이후 천명 이상의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로 여행을 갔다가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을 방문했다. 곧이어,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독 정부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봉쇄하자 동독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당서기장이던 호네커(Erich Honecker)는 동독 주둔 소련군

[1] 고르바초프는 동독을 방문하여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에게 "개혁을 늦추는 자는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였으나, 호네커 서기장은 "죽음을 선언한 자는 오래 생존하는 것이 상례"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호네커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동독 공산당 정치국 내에서도 호네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동독 공산당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되어 당내 분열이 표면화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 『독일통일 모델과 통독 후유증』, 1997년. pp. 55~56.

을 사용해 주민들의 시위를 탄압하려 했으나, 소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계속되는 동독 주민들의 시위로, 호네커는 결국 10월 17일 사임하게 되었다. 후임 서기장인 크렌츠(Egon Krenz)는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지만, 10월 30일 동독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쉬러(Gerhard Schürer)의 동독 경제가 파산 직전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동독 주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2] 그 후 '말실수'로 알려진 동독의 공보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Günther Schabowski)의 여행 자유화 발표 직후, 동서독 국경은 전격적으로 개방되었다.[3]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붕괴하였다. 이후 1989년에만 약 39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의와 용기로 동독에서는 분단 후 최초의 자유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고, 『경제·화폐 통합조약』과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은 서독으로 편입되었다. 독일통일의 법적인 기초는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동독인민회의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을 서독 기본법 적용 영역에 1990년 10월 3일에 편입한다고 선언하여 이루어졌다.[4] 그리고 2차 대전 전승 4개국의 승인하에, 베를린 장벽 붕괴 약 11개월 만인 1990년 10월 3일 독일

[2] 쉬러는 『동독의 경제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동독은 몇 차례의 경제 개혁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상환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와 내부 자원의 소진이었으며, 국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서독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Gerhard_Sch%C3%BCrer.

[3] 『교포신문』(Koreanische Wochenzeitung), "독일통일 3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독일통일까지 ①" 참고. http://kyoposhinmun.de/speziell/2020/08/10/7070/.

[4] 독일의 기본법 제23조는 서독 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서독 12개 주로 나열하고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들의 편입 후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기본법 제146조는 "기본법은 독일 국민이 자유로이 결정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민당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제23조에 의한 통일은 동독의 식민지화라는 비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민당은 독일통일의 지연을 막기 위해 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통일을 헌법적으로 승인하였다. 동서독 통일 후 기본법 제23조는 폐지되었고, 기본법은 대폭 수정되었다. 독일통일과 관련한 기본법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베르너 바이덴펠트·칼루돌프 코르테 편저 (1998) 참조.

은 재통일되었다.

통일 후 동서독 주민의 기쁨과 감격은 순간이었고, 통일 독일은 곧 낙후된 동독 경제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동독지역 주민들은 낮은 생산성에 비해 평균임금과 복지 혜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결과 동독기업의 제품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고, 동독지역의 생산시설은 경쟁력을 상실해 대부분 도산하게 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수준의 사회보장을 누릴 기회를 맞게 되었지만, 생산시설의 붕괴로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4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중간 단계나 조정 기간 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후 연방정부가 추진한 부문별 통합 작업은 잘 시행되었다. 그러나 동서독 경제통합과 동독지역 재건 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가장 큰 염려는 경제지원보다는 동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였다. 당시 연방정부가 추진했던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는 인구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여 독일통일기금, 통일연대세, 연대협약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특임관(Beauftragte; commissioner)도 임명하였다.

통일 초기,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시행하였다.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서독의 높은 임금과 상대적 환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화폐의 환율을 최고 4천 동독 DM까지는 1:1, 일반적으로는 2:1로 교환하였다. 당시 환율은 동독 주민의 화폐 유동성 증가와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 동독 주민의 대량 이주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환율로 인해 동독 화폐는 급속히 평가절상 되었다. 동독 화폐의 400% 이상 평가절상으로 급격한 생산비용의 증가에 의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였다.

서독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동독 근로자의 명목 임금도 상승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동독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서독 대비 약 7%에서 60%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동독지역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동독 주민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 기간에 구동독의 많은 생산시설이 높은 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몰락하였다. 실업률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은 서독 정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어, 서독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막대한 동독 경제의 부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부채,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독일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5] 하지만 통일 전부터 동독지역에 서독 마르크화가 통용되었고, 통일 후 막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물가상승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 초기 연방정부의 동독지역 부흥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독 주민들은 경제 여건이 좋은 서독으로 이주하였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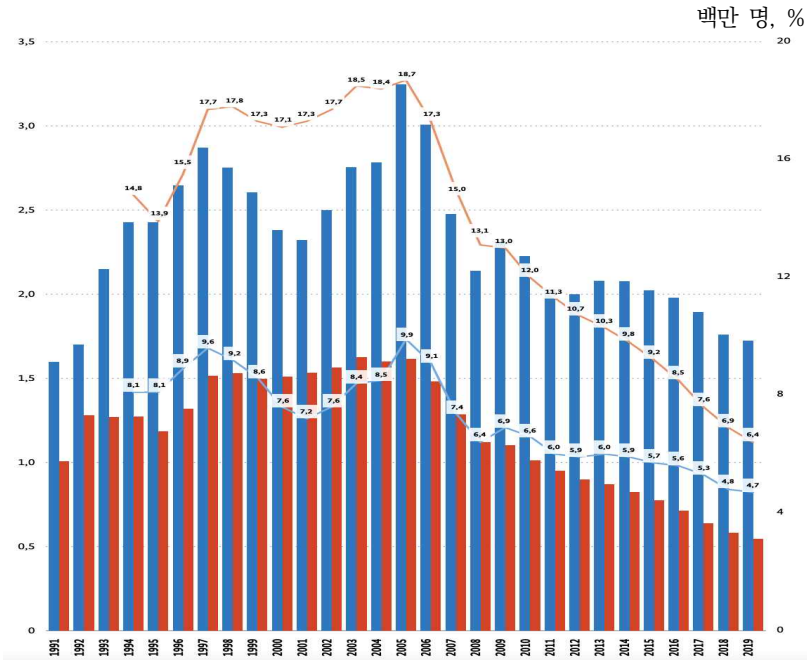
당시 연방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목표는 경제성장, 고용 창출, 산업구조조정, 혁신산업 개발 등 구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일정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일차적으로 동독지역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실행

[5] 1990년 2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독일이 통일비용으로 연간 약 1,900억 마르크 정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다시 인상된 액수를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동독 경제가 서독경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 1조 5천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가 2조 마르크로 수정 제시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구동독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추가 수요를 1,600억 마르크에서 2,800억 마르크, 다시 2,030억 마르크로 정정 발표하였다. 이 같은 추정치의 계속된 오류는 동독 경제의 실상에 대한 무지, 동독이 안고 있는 부채 처리 때문에 발생했다. 우베 뮐러(2006) 1장과 3장 참조.

[6] 대표적인 주장은 Sinn and Sinn(1994) 참조.

되어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7]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동독지역의 생산성과 성장률은 크게 반등하지 못했고, 〈도표 1〉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지역을 크게 넘어서게 되었다.[8]

〈도표 1〉 동서독 실업자 수와 변화율 추이



동독 실업자 수(베를린 포함) 서독 실업자 수
동독지역 실업률(%) 서독지역 실업률(%)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72.

7) 동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현상을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였다. EU 통합 후 다수의 동유럽 국가 노동자들은 새 직장을 찾아 복지 혜택이 높은 서유럽 국가로 이동하였다. László Andor(2019)는 이런 현상을 복지 쇼비니즘(welfare chauvinis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8) 이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자료는 주로 독일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the New Federal State)가 발표한 *Annual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the Status of German Unity, 2019*(앞으로 『독일통일보고서 2019(영어판)』로 표기)와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20*(앞으로 『독일통일보고서 2020(독일어판)』로 표기)에서 인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일통일 30년을 맞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상황과 구동독 지역 성장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에 주는 교훈을 찾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통일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동서독 경제 격차의 원인과 동서독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주요 정책을 평가한다. Ⅳ장은 구동독 사례를 통해 통일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과 정책을 간략히 논의한다.

Ⅱ.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과 제약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구조적인 유산을 안고 있었던 낙후된 구동독 지역은 통일 초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큰 경제적 혜택을 얻었다. 1993년 동독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12%인데 비해 서독지역은 -2.4%를 기록했다. 당시 동독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동독지역 자체의 생산성이나 기술력으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정확하게는 서독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동독지역은 1995년까지는 지원에 의한 한때는 '반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도표 2〉를 보면 1993년 동독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12%에 달하고 있다. 독일통일 초기, 동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지원법도 도입되었다. 투자증가로 동독지역에서는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노동 가격보다 낮아, 많은 생산시설에서 생산설비의 구성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동독지역은 서독지역보다 자본재가 풍부하게 공급되었다.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독 노동자들이 생산에 사용하는 생산도구나 기자재의 수준이 서독 노동자가 사용하는 생산도구의 수준보다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과 함께 동독지역에서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대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동독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 2005년까지 서독경제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독일경제는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세를 이루면서 동서독 실업률도 200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유로화가 통용되면서 독일의 수출은 역내 외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독일 마르크화(DM)를 유로화(€)가 대체하면서 환율 인상 염려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막대한 무역흑자로 독일의 재정 상황이 대폭 향상되었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유로화 약세로 독일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로는, Hartz 개혁을 포함한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노동 개혁이 상당 부분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사 공동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다.[9] 많은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였다. 이는 독일이 시행한 가장 놀라운 경제 개혁이라 할 수 있다.[10] 〈도표 1〉이 예시한 것처럼 2005년을 정점으로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계속 감소하여 최고 19%에서 2019년에는 6%대로 감소하였다. 동독지역 경제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동독지역의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했다.

통일 독일의 가장 큰 문제였던 동서독 지역의 생산성과 소득격차도 감소했다. 통일 초기 서독 대비 약 40%에 머물던 동독지역의 생산성은 2018년에는 80%를 넘어섰다. 그러나 동서독 경제 격차가 수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통일 30년이 된 현시점에서도 동서독 지역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때로는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동서독 지역 모두가 높은 생산성과 고용기회 균등을 달성하기를 원하지만, 그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작센주와 같은 일부 동독지역은 상당한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동독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는 동독지역의 성장 특화요인을 잘 규명한다면 미래의 통일 한국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9) 대표적으로 기간제, 파견, 파트타임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유연성을 높인 점도 높이 평가된다.
10) 상세한 내용은 신성원(2014), pp. 9~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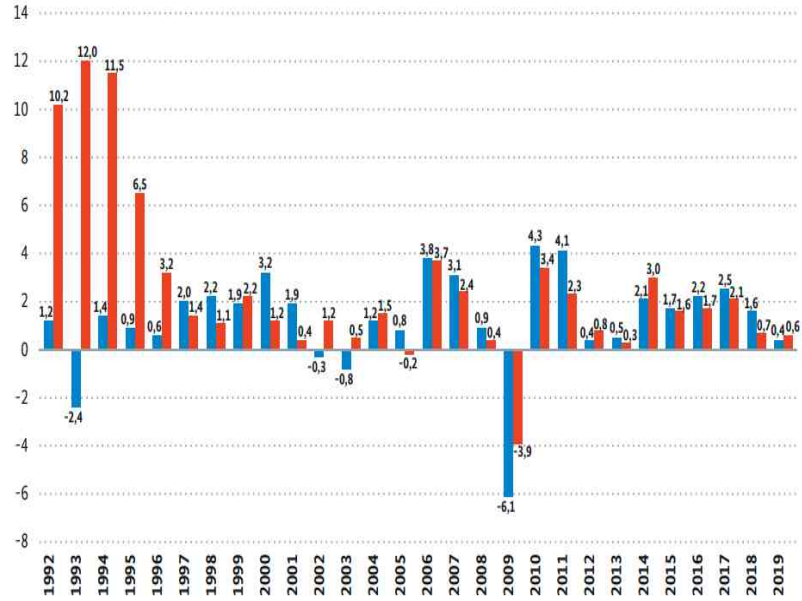
1.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

1996년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지역의 1인당 투자액은 줄어들어 생산성은 정체되기 시작했다.[11] 동독 경제의 GDP 성장률도 199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다시 서독지역의 성장률이 동독지역의 성장률을 앞서게 되었다. 당시 동독지역의 1인당 투자액은 서독지역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동독지역에서 일시적인 특별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동독지역으로의 자본 투입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었다.[12] 더욱이 동독 주민들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공산권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COMECON) 시장의 붕괴 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동독지역의 생산시설은 도산하게 되었다. 지역 내 생산시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화폐통합으로 인한 실질 임금과 물가, 생산원가 등이 인상되면서, 구동독 지역은 다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침체를 겪게 되었다(〈도표 1〉과 〈도표 2〉 참조). 연방정부의 지원도 통일 초기에 비해 감소하면서 실질 국민총생산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2~3%의 성장률을 유지하게 되었다.

11) 1996년까지는 동독지역에 투자할 경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12) 서독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2003년부터 동독 노동자의 총고정자본형성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정형곤(2020), pp. 11~12.

〈도표 2〉 전년 대비 동서독 지역의 실질 GDP 변화(%)



서독 신연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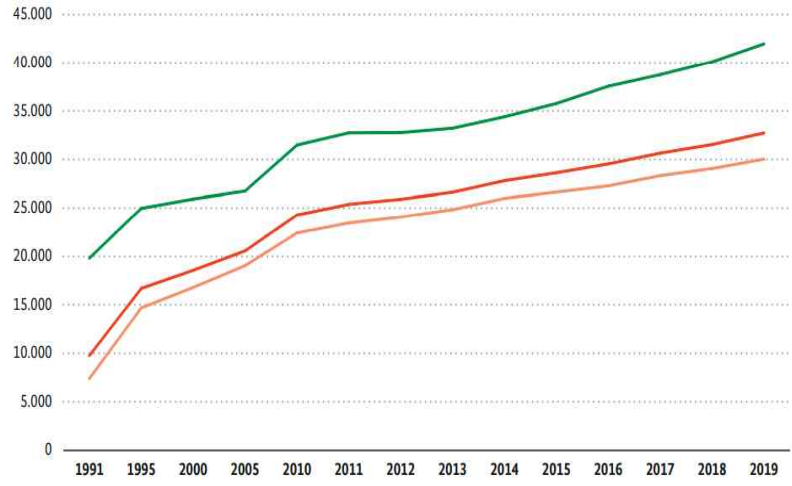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55.

당시 동독 주민들의 생산과 소득은 낮았지만,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결실을 거두어,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지역 경제는 고용 증가가 발생하였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5년도 18.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4.7%의 실업률을 기록했다(〈도표 1〉). 실업자 수도 170만 명 수준에서 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서독 대비 실업도 크게 개선되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의 생산과 소득은 거의 파산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동독지역 경제는 고용 증가와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을 기점으로 독일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는 사실을 예시한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통일 독일의 실업률은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줄어들어, 통일의 경제적 후유증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동독 지역은 주별로 발전과 성장 경로가 달랐다. 베를린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총생산을 달성하였다. 기타 동독지역과의 1인당 명목 GDP도 약 10,000€ 가까이 차이가 난다(〈도표 3〉). 이는 중심 도시의 존재가 소득 증대에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베를린은 통일 독일의 수도로서 예외적으로 신속한 발전과 외부 투자 유입 현상이 나타난 특수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도표 3〉 동독지역의 1인당 명목 GDP(€)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55.

베를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센주가 5개 신연방주 중에서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이유는 작센주는 산업발전의 전통이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수출에 유리한 점이 작용했다. 작센주는 신연방주 중에서 가장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작센주는 정책적으로

부채관리에 중점을 둔 긴축 예산정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경제외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안정이 작센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 기본법이 연방주의 원칙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신연방주의 개별적 정체성보다는 지역적으로 결속하는 정체성이 형성된 이유도 있다. 신연방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신속한 정착과 독일의 오랜 전통인 지방자치와 분권화가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13]

2. 구동독 지역의 성장 제약 요인

일부 구동독 지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구동독 지역의 전반적 경제 상황은 서독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인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이 아직 서독지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4〉가 예시하는 것처럼 2019년 베를린 주민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약 90% 정도이지만, 기타 구동독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베를린 지역은 독일의 수도로서 자본이 풍부하고 외부에서 유입 우수한 인적 자본과 양질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기타 동독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 10년간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대비 약 4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생산성은 80%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베를린을 제외한 동서독 지역의 생산성 수렴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14] 반면, 서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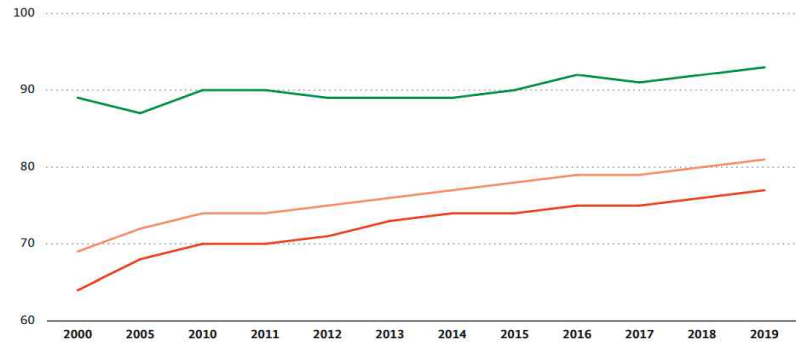
[13] 상세한 논의는 이은정·에버하드 홀트만(2020), pp. 223~225 참조.

[14]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때문이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 드레스덴 지부의 라그니츠(Joachim Ragnitz) 소장은 "동독지역 연금 수령자 수입은 서독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며, 동독 경제는 재정지원 경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라인강 기적 밑거름된 동독, 왜 무너졌나," MIDAS, 2016년 2월호.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60203200306_540914.

대비 동독의 실질 가격 노동생산성이 1990년 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약 75% 정도까지 근접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다. 이 통계치는 유럽연합의 평균에 근접한다.

〈도표 4〉 구동독 지역의 실질 가격 노동생산성 (시간당 기준)

서독의 노동생산성=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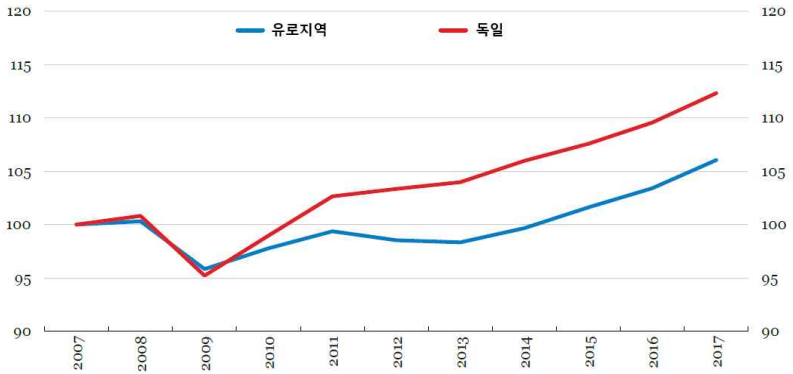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59.

서독지역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동독 주민의 상대적 불만도 존재하지만, 독일의 실질 국민총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구동독 주민들은 다른 국가 구성원들에 비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도표 5〉가 예시하는 것처럼 2009년 이후, 독일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1인당 실질 총생산은 유럽연합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 경제적 평가는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동독지역의 경제지표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동독 주민의 1인당 가계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세금 전 수입은 서독 대비 약 85%까지 증가하였다. 베를린 지역을 포함하면 86%에 달한다(〈도표 6〉). 동독지역의 물가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동독지역 가구의 수입과 지출은 서독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도 있다.[15]

〈도표 5〉 유로 지역 국가와 독일의 실질 GDP 비교

2007~2017, 2007년=100 기준



자료: OECD(2018).

〈도표 6〉 독일의 1인당 가계의 가처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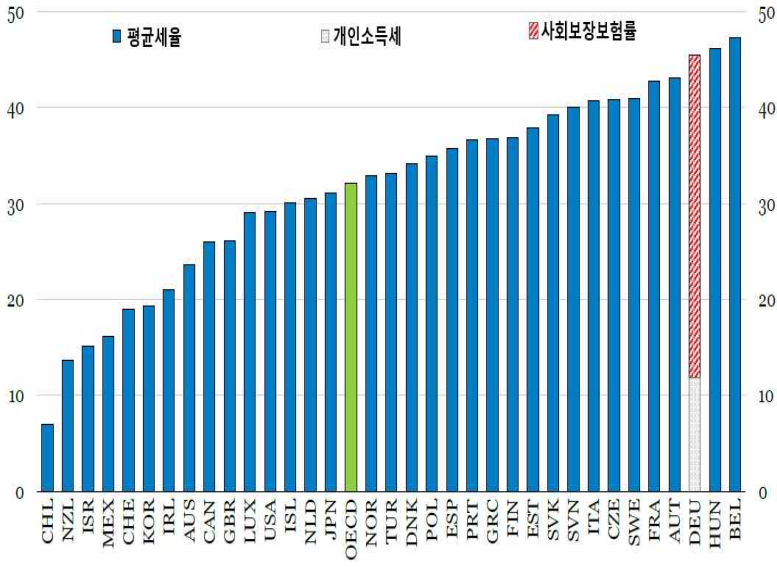
Year	Berlin	Western Germany	Eastern Germany	New federal states	Germany	New federal states/western Germany	Eastern Germany/ western Germany
			in €			in %	
1991	13,055	13,788	8,352	7,248	12,560	53	61
1995	15,367	15,316	12,175	11,400	14,637	74	79
2000	15,539	16,598	13,563	13,091	15,961	79	82
2005	16,402	18,546	15,100	14,778	17,848	80	81
2010	17,856	20,100	16,836	16,572	19,452	82	84
2011	18,183	20,719	17,264	17,023	20,035	82	83
2012	18,380	21,202	17,585	17,373	20,487	82	83
2013	18,552	21,390	17,914	17,741	20,704	83	84
2014	18,719	21,836	18,259	18,133	21,132	83	84
2015	19,206	22,179	18,658	18,505	21,487	83	84
2016	19,538	22,633	19,158	19,051	21,952	84	85
2017	20,330	23,283	19,909	19,788	22,623	85	86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19 (영문판)』, p. 118.

15) Financial Times, "Lingering Divide: Why East and West Germany Are Drifting Apart," August 29, 2019.

앞서 〈도표 1〉에서 예시한 것처럼 실업률도 동독지역(6.4%)과 서독지역(4.7%)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통일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독일 국민은 최고 수준의 소득세와 사회보장금을 부담하고 있다(〈도표 7〉).

〈도표 7〉 노동비용 중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보험 비중 (%, 2017)



자료: OECD(2018). p. 16.

3. 동서독 경제 차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동독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다. 독일통일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책 『대재앙 통일』을 저술했던 뮐러(Uwe Müller)도 독일의 자구 노력으로 인해 동독지역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일의 실업률도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재정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어, 2014년 경우 45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신규 채무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실제 동독 경제의 발전은 서독의 지원 때문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동독 주민 1인당 매년 약 5천 유로가 지원되는데, 이 지원금은 대부분 동독 재건 프로그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지출을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한다.[16]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가 세율 인하와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은 찬성도 많았지만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가져와 정치적 저항도 발생했다.[17] 그러나 개혁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져왔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의 실질 임금은 0.8% 감소하여, 유럽 국가 중 최소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실질 임금은 각각 9.6%, 26.1% 하락했다. 이런 경제 개혁 덕분에 통일 독일은 세계 금융위기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잘 극복하여, 현재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높은 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독 주민들의 57%는 스스로 2등 시민으로 느끼고 있으며 통일을 성공적이라 느끼는 사람들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층은 약 20% 정도만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18] 그러나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동독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서독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동독의 경제, 사회 지표들이 다른 EU 국가와 달리 독자적 수치로

16) 우베 뮐러(2016) 참조.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60203200502_934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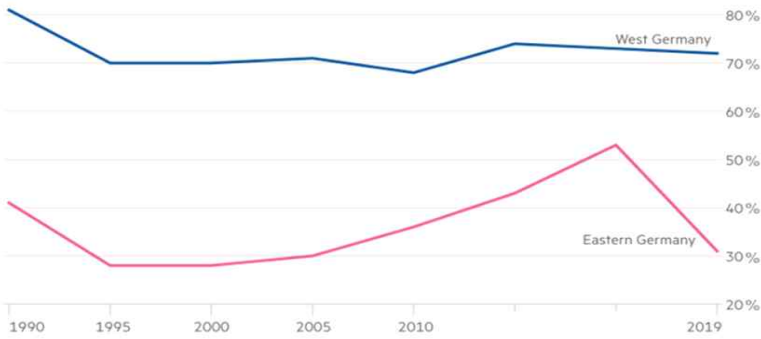
17)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빈곤 문제가 발생했고, 갈등 해결 방식도 합의보다는 대결 형식이 선호되어 많은 노동자의 저항을 가져왔다. 자세한 논의는 김상철(2014) 참조.

18) Financial Times, "Lingering Divide: Why East and West Germany Are Drifting Apart," August 29, 2019에서 재인용.

평가되지 않고 서독지역 지표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자국에서의 상대적 비교는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언론 보도는 동서독 지역 경제의 형평성을 늘 의식하게 된다.[19]

일부의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삶의 질적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 발전 외에도 도시가 발전하고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가 현대화되고 강력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과거 환경 오염국의 오명을 벗고 환경이 잘 보호되고 있으며, 혁신적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큰 무형적 이익도 얻었다. 그러나 한 권위 있는 여론조사는 동독 주민들의 적합한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199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급격히 감소한 점을 예시하고 있다(〈도표 8〉). 그 이유는 구동독 주민들이 통일전에는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있었다면 현재는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을 내세운 새로운 독재가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도표 8〉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부 형태라는 믿음



자료: IfD-Allensbach, Financial Times, August 29, 2019에서 재인용.

19) 이 사례를 한반도 통일에 적용해보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독일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부각 될수록 통일 정부의 경제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Financial Times 보도는 독일통일 후 경험하는 새로운 체제에 대해 "구동독 시절에는 모든 인민은 하나였고, 모두가 함께했다…. 통일 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다수는 '반짝이는 금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동독 주민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동독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방식이나 기준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런 인식의 공유는 한반도 통일 준비에도 절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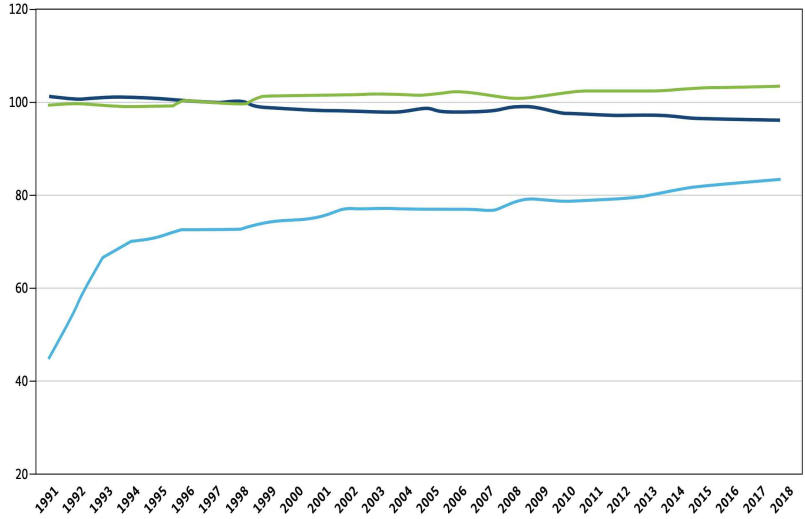
Ⅲ. 동서독 경제 격차 원인과 감소 정책

1. 노동생산성과 소득수렴

통일 후 독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를 줄여 동서독 경제의 수렴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 30년을 맞은 독일은 아직도 동서독 경제 수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이 모든 서독지역보다 낮기 때문이다(〈도표 9〉). 통일 초기, 구동독 지역의 산업시설은 너무 낙후되어 서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당시 구동독 노동자의 생산성도 서독 노동자보다 매우 낮았지만, 동독지역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급속히 인상되어 동독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구동독의 대부분 산업시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사회 인프라도 매우 취약하였다. 전반적으로 동독지역은 서독지역과 비교해 산업화 수준, R&D 투자, 자본 스톡, 수출 경쟁력 등이 매우 낮았다. 산업 클러스터도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고급 노동 인력이 부재하며, 대기업 본사와 같은 경제 두뇌 기관도 부족하였다. 동서독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과 함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지만, 모두가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장기적 정책 과제였다. 반면 〈도표 9〉가 예시하는 것처럼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은 통일 초기 서독 대비 40%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80%를 넘어서 동서독 경제 수렴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9〉 독일의 노동생산성

서독기준 = 100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19 (영어판)』 p. 21.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통일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지역의 80% 정도에 정체되어 있다. 물론 통일 초기에 비해서는 큰 진전일 수도 있겠지만, 막대한 지원을 고려한다면 기대보다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겠지만, 사회주의 유산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동독 지역의 낮은 생산성은 이탈리아 남부의 메쪼지오르노(Mezzogiorno) 현상과 비교되기도 한다. 남부 이탈리아는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많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20] 이탈리아의 경우 2000부터 2013년까지 남부지역의 경제 성장

률은 누계 13%에 불과했고, 24세 미만의 실업률은 5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EU 전체 경제는 54% 가까이 성장하였고, 경제 비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그리스도 누계 24% 성장을 달성했다.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후진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북부지역보다 산업 개발이 늦어진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남부지역은 북부지역과 경쟁할 수 없어 산업화를 거의 포기했다. 중앙정부에서 유입되는 많은 보조금도 노동 의욕을 좌절시켰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가들은 약 990억 유로를 지원했지만, 경제효과와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은 취약했다.[21] 지역 특성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도 동서독 지역의 생산성 차이로 인해 동서독 주민의 소득이 차별되고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독일의 ifo 연구소는 독일 대학의 경제학 교수 136명에게 동독이 향후 몇 년 내에 경제적으로 서독 수준을 달성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 응답자는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경제 수준이 완전히 수렴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으며, 참가자의 69%는 두 지역의 수준이 향후 몇 년 또는 수십 년 내에는 수렴되지 않으리라고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22] 가장 큰 이유로는 동독지역의 두뇌 유출에 따른 인적 자본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이주가 장기적으로 동독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 여성의 이주를 막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독지역은 아직도 사회

---

[20] 대표적인 연구는 Boltho, Carlin, and Scaramozzino(199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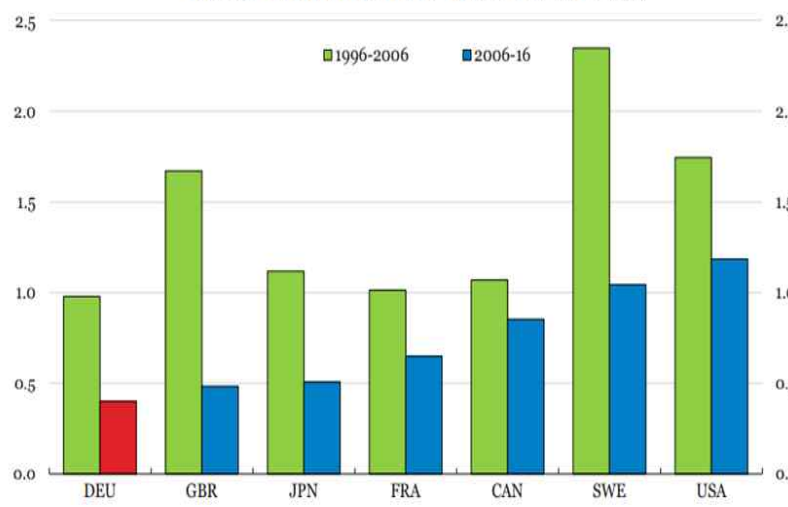
[21] "The Misery of the Mezzogiorno," https://www.dw.com/en/the-misery-of-the-mezzogiorno/a-18667335 2015.8.23.

[22] ifo Institut, "70 Yea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What Is the Future for our Economic Order?" *ifo Schnelldienst* 11/2019, Nr. 11, 03-22. https://www.ifo.de/en/publikationen/2019/journal-complete-issue/ifo-schnelldienst-112019.

주의 유산이 남아있고 지역발전이 서독에 비해서 미약하므로 많은 동독의 노동력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OECD의 발표에 의하면 통일 독일의 2015년도 상대적 빈곤 비율은 약 15%로 영국(17%)이나 OECD 국가들 평균(18%)보다 낮다.[23] 그러나 독일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도표 10〉을 보면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동독지역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도표 10〉 국가별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OECD(2018), p. 10.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은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 2019년 동독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850으로 서독 노동자의 €3,340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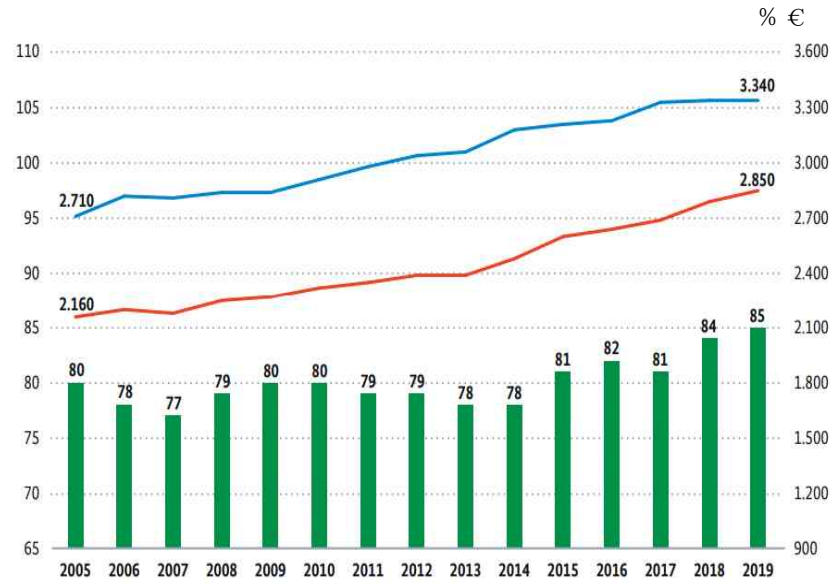
[23]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 of Germany: Sustaining Strong and Inclusive Growth,* June 12, 2018.

85% 수준이었다. 〈도표 11〉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의 동서독 임금 비율의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 동독지역의 임금이 2019년에는 서독의 85%까지 도달했다. 그 이유는 우선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동서독 임금 차이는 동독지역기업들의 노사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서독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서독 지역의 생산성 및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감소 속도가 완만하여 완전한 수렴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표 11〉을 보면 동독지역의 월평균 수입이 서독지역 대비 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80% 수준이 2019년의 85%로 증가하기까지 1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때, 완전한 통일이 달성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동서독 지역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면 통일 전에 비해 구동독 지역 주민의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된 사실은, 상대적인 면에서는 불균형을 이루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개선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동독 주민의 다수가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 유지를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동독인은 서독인보다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독일인은 통일 후 동독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은 인정하지만, 동서독 지역의 소득수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24]

[24]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Pew Research Center가 2098년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동독지역 주민들은 동서독 생활 수준이 같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74%가 부정적인 견해를 들어냈고 반면 서독 주민들은 66%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동독 주민의 42%가 다음 세대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 서독 주민은 50%라고 응답했다. Pew Research Center, Spring 2019 Global Attitude Survey, "East Germany has narrowed economic gap with West Germany since fall of communism, but still lags," FACTANK, December 6, 2019 참조.

〈도표 11〉 동서독 월평균 총수입 액수와 정렬비율: 2005~2018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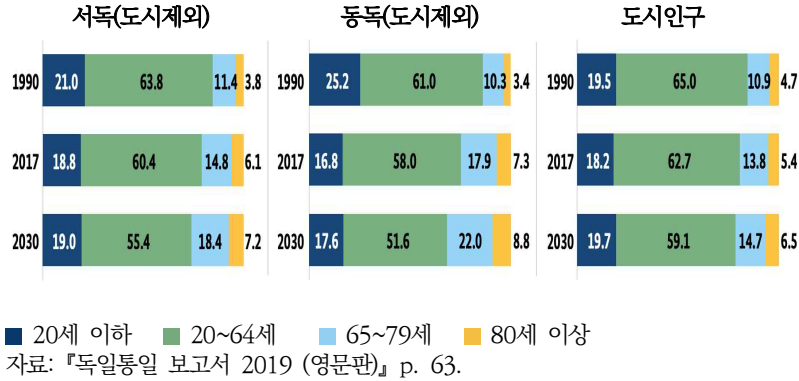
2.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와 노령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약 8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했지만, 1992년에는 이주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다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 수가 증가하다가 2001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동독 주민의 초기 서독으로의 이주의 이유는 주로 낙후된 동독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때문이다. 1990년 2월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가 동독지역의 정치개혁이 늦다고 대답했고, 젊은 계층일수록 고향에서의 삶에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직업교육 부족,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부족, 좋은 학교

에 대한 수요 등이 주된 이유였다.[25] 실제로 동독지역의 생산성이 낮아서 동서독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려워 동독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많은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주로 젊은 층과 특히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 결과 동독지역의 고령화율은 상승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였다. 〈도표 12〉는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20세부터 64까지 노동을 주로 제공하는 계층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표 12〉 독일 인구의 연령별 구성 (1990년, 2017년, 2030년 %)



자료: 『독일통일 보고서 2019 (영문판)』 p. 63.

높은 노령화율은 장기적으로 동독지역 경제의 활력을 서독지역보다 더 감소시키게 된다. 1990년~12012년까지 동독지역의 취업 연령층은 1,120만 명에서 1,010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서독지역은 4,010만 명을 유지하였다. 베를린과 동독지역에서 45세부터 60세까지의 노동

[25] 정재각·허준영. 2018.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이주와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 25, 『이주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p. 69~71, pp. 74~78.

자 연령층은 41%에서 53%로 증가하였다.[26] 따라서 동독지역의 인구 감소 비율이 서독지역을 상회하는 한 동서독 경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동독지역의 재산업화 정책

통일 초기 단계에서 구동독 지역의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해외유치가 필요했지만, 부실한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투자저해 요인이 많아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미미했다. 자연히 동독지역 기업들은 매각되거나 정리되었다. 예외로 식료품처럼 현대화된 운송 수단이 크게 필요가 없는 상품들은 동독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지만, 많은 상품은 동독지역에서의 생산과 판매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당시, 구동독 지역은 서비스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컴퓨터 시스템, 출판, 보험, 은행, 광고, 언론 및 방송 미디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부재로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이 미약했다. 당시 서독지역은 Frankfurt는 금융업, Düsseldorf는 의료업, Hamburg는 출판업 등 지역별로 대표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독의 경우는 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 산업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산업 구조의 변화, 동독 노동력의 생산성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통일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 안에도 큰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 서독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발달하였지만, 동독의 경우는 발전격차가 심하고 산업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다. 연방정부는 동독의 특정 지역을 집중 발전지역으로 선정하여 투자와 기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6] 정재각·허준영(2018),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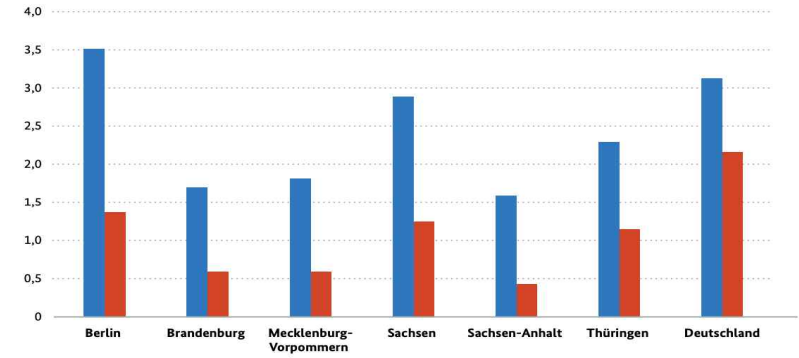
이 정책은 'beacon region'으로 불리기도 하는 Dresden, Jena, Leipzig, Leuna, Berlin 등과 같은 선도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이유는 동독지역의 많은 기업이 중점 도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연결 고리를 구축하여 더욱 현지화된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독지역에서는 산업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도시인 Jena(광학 및 전자산업), Magdeburg(기계공학), Dresden, Freiberg 및 Chemnitz 지역(고밀도 집적회로 산업), Saxony-Anhalt의 Leuna(화학산업), 베를린과 Brandenburg(에너지 기술)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이들 지역이 현재 에너지와 환경 기술과 같은 미래산업의 연구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Magdeburg와 Rostock(풍력기술), Mecklenburg Western-Pomerania(전문 기계 및 플랜트 사업) 등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는 동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27]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과 투자를 통해 동독지역에서 GDP 대비 R&D 지출은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로 실현되었다(〈도표 13〉 참조). 2017년 동독지역의 R&D 지출 비율이 독일 전체보다는 낮지만, 총액 기준으로 베를린 지역의 비율이 독일 전체 비율보다 높고 작센주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입지 여건이 좋은 주들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추론도 할 수 있다. 베를린은 수도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작센주는 국경과 인접한 국가들과의 무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서독 경제 격차 차원에서 보면, 동독지역은 재산업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지만,

[27] Focus On: The Industrial Sector in Eastern Germany, "Reindustrialisation in the new eastern German states," https://www.bmwi.de/Redaktion/EN/Dossier/neue-laender.html.

서독도 산업변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동독의 산업발전 속도가 서독의 산업발전 속도보다 낮아 동서독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28]

〈도표 13〉 2017년 GDP에서 R&D 지출 비용(%)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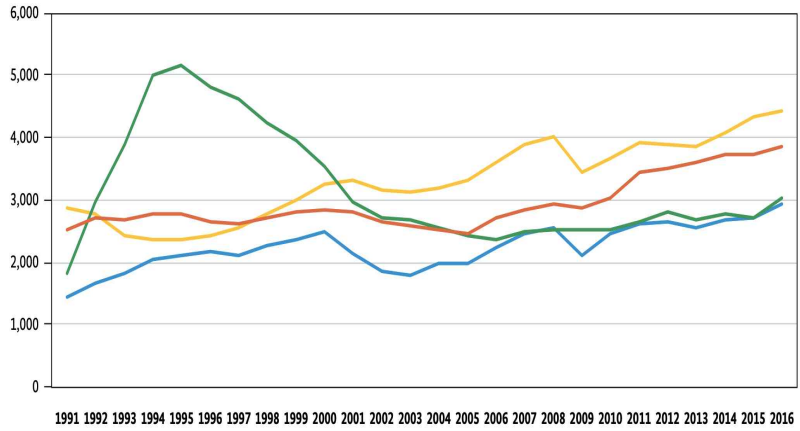
4.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증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차이는 생산성, 자본 유입과 투자 액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아직도 동서독의 사업환경이나 고용 여건 측면에서 동독은 서독보다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다. 2017년 기준으로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서독의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32%를 차지하는 반면 동독의 경우 약 23%이다. 〈도표 14〉와 〈도표 15〉는 독일에서 1인당 투자액 추이를 보여준다. 동서독 지역을 비교해볼 때 새로운 장비와 새 건물에 대한 투자액은 서독지역

[28] Focus On: The Industrial Sector in Eastern Germany, "Reindustrialisation in the new eastern German states," https://www.bmwi.de/Redaktion/EN/Dossier/neue-laender.html.

이 동독지역을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대한 자본 투자 여건과 수익이 높아 동서독 투자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표 14〉 1인당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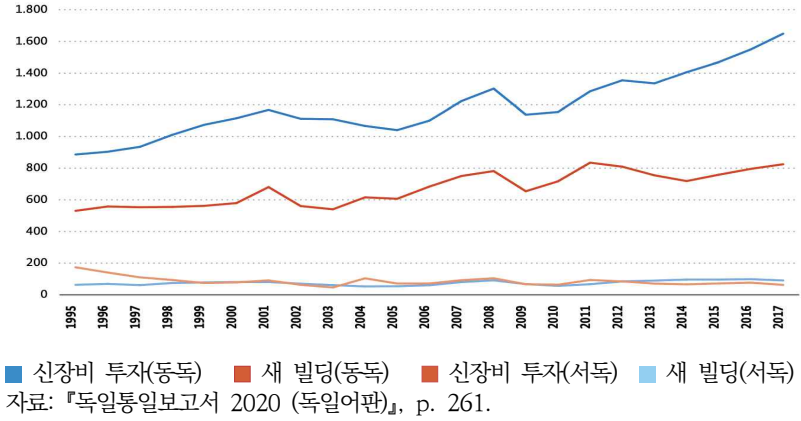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19 (영문판)』, p. 104.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동독 주민에 대한 1인당 투자액도 증가했지만, 상당 액수가 사회보장이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점도 동서독 경제 격차의 한 원인이다. 동독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산을 정리하지 못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점 때문에 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서독기업보다 낮게 나타난다. Kolling(2016)은 공공 기금이 동독 내 기업이나 사업 현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고용연구소(IAB)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독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일전 동독에서는 국영기업에 공적자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가능한 많은 고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거에 투자유치 경력이 있는 기

업들도 상당수가 부채 등 미처리 자산이 많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은 유발되었지만, 대상 기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아 대부분 수익 창출이 거의 정체되었다.

〈도표 15〉는 일인당 상품생산 투자액 중 신장비 투자 액수는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연히 서독 주민이나 기업들의 반발이 발생하게 되었다.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은 동서독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 초기 동독 주민의 소득은 연방정부의 투자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했지만, 생산성이 현재 서독 주민의 약 85%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성장률도 둔화하였다.

〈도표 15〉 1인당 상품생산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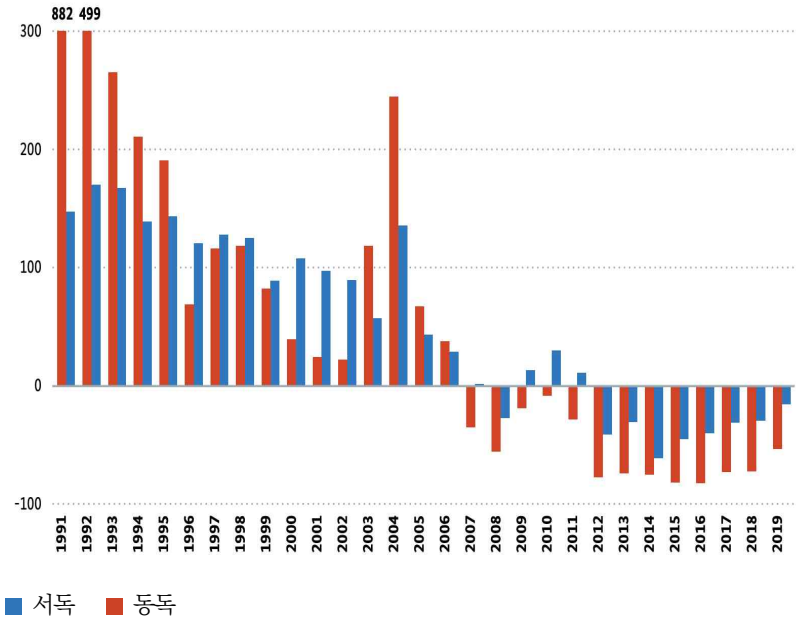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61.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통일 초기의 '반짝 특수'와 정부 투자의 열기가 감소한 후에 다시 서독지역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도표 16〉). 2012년 이후에는 10만 명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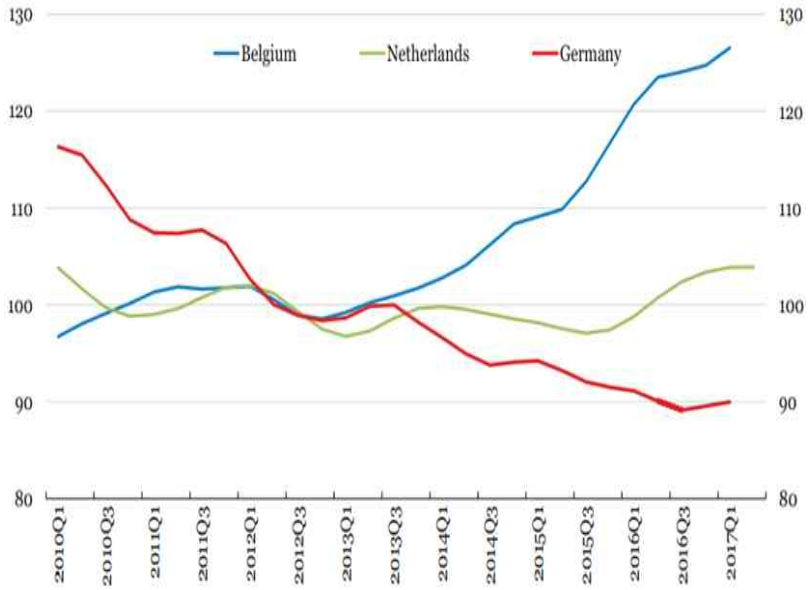
그 이유는 동독지역에는 소수의 대기업만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구조로 인해 동독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동독으로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동독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와 필수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이동과 젊은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독 경제의 성장은 둔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독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도표 17〉을 보면 독일에서의 새로운 기업의 창출은 2013년 이후 경쟁국인 네덜란드, 벨기에와 비교하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향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도표 16〉 인구 100,000명당 사업체 수 변화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65.

〈도표 17〉 새로운 기업 창출(분기별)



자료: OECD(2018), p. 10.

5. 수출 증가로 인한 동독지역의 발전

구동독지역이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다른 이유로는 지역내 기업의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EU가 출범하면서 경쟁력 있는 독일 상품은 유로존 내에서 유로화로 수출하게 되어,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 조정 없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동독의 수출증가율은 서독의 2003년 수준과 유사하며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약 25%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도표 18〉), 상품생산의 수출증가율은 약 3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도표 19〉). 실제로 동독지역은 수출 관련 원자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은 동독지역의 평균 생산성보다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20년의 격차를 두고 동독지역의

생산성을 비교한 Boltho, Carlin, Scaramozzino(1996, 2018)의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통일 초기에는 동독지역의 생산성이 서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미래의 동독지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논지를 제시했지만, 20여 년 후 동독지역의 상품 수출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통일 초기 구동독지역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한 중요한 해결 방법이 수출증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독지역 내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시나 주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29] 물론 2019년 현재에도 동서독의 전체 수출증가율이나 상품 수출증가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독지역이 과감한 수출 중시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동서독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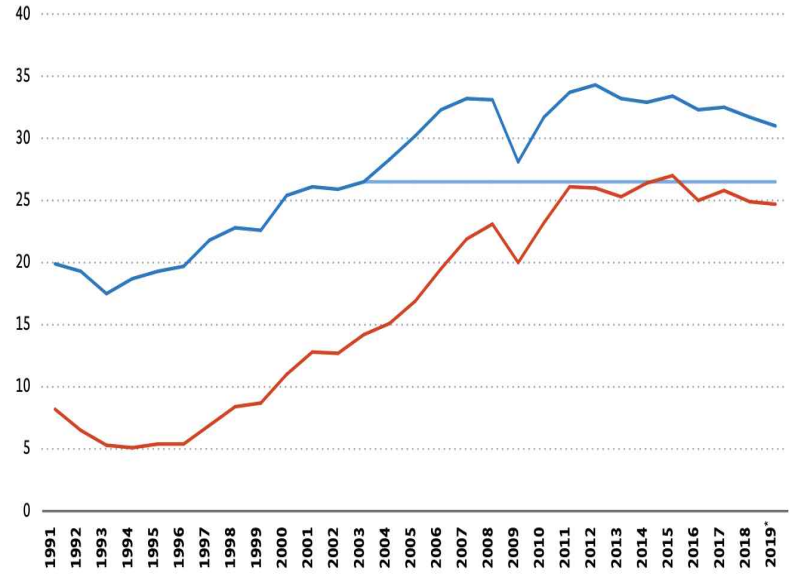
다른 견해로는,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지속적인 격차를 들 수 있다. Burda and Severgini(2018)의 연구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이나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방식으로는 1995년 이후 동독지역의 TFP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연구에 의하면 역설적으로 동독지역의 자본 집약도는 서독의 가치를 능가하고 있지만 채택된 기술에 많은 문제가 있고, TFP 증가율이 투자 지출 비율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서독의 노동생산성 차이가 현격한 TFP 격차와 R&D 활동 정도보다는 동독지역이 관리자 집중도가 낮고 창업 강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는, 동독과 서독의 제조업 수출의 이윤 차이를 분석해 생산성 격차를 규명하고 있다. Wagner(2016)의 연구에 따르면

[29] 동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센주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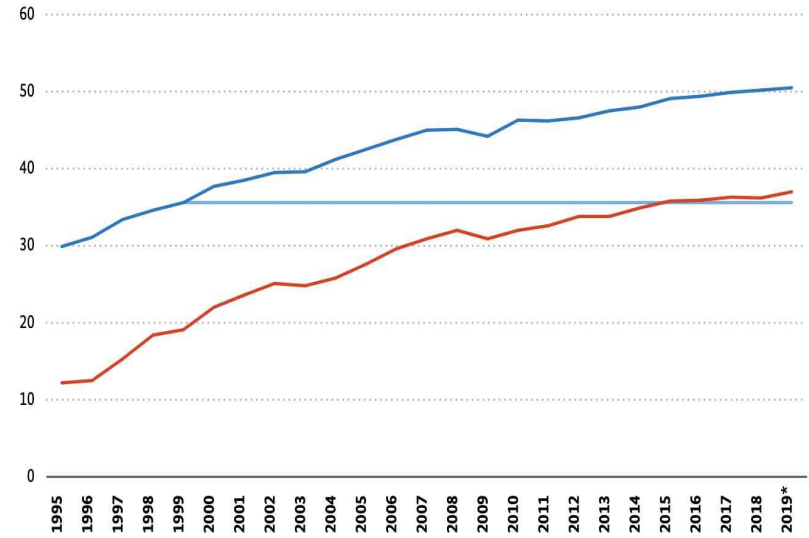
2010년까지 서독기업들은 수출에서 동독기업들을 모두 능가했다. 당시 서독의 수출 성향이 동독보다 높았고, 총매출액도 많았고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였다. 2010년에는 이윤이 약 59%에서 78%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서독기업이 동독기업 대비 훨씬 높은 인적 자본 집약도를 보유하고 있고 전통 기업의 점유율도 더 높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도표 18〉 수출 증가율(%)



서독 동독(2004년까지 동베를린, 2005년 이후 전체 베를린 포함)
서독(2003년 기준)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63.

〈도표 19〉 상품생산 부문 수출 증가율(%)



서독 동독(2004년까지 동베를린, 2005년 이후 전체 베를린 포함)
서독(1999년 기준)
자료: 『독일통일보고서 2020 (독일어판)』, p. 263.

Dauth, Findeisen and Suedekum(2014)는 1988년~2008년 기간 동안 독일이 중국과 동유럽을 대상으로 달성한 전례가 없는 높은 무역 증가가 독일 현지 노동시장에 준 영향을 분석하였다. 초기 산업 구조의 지역 간 변동을 활용하여, 다른 고소득 국가의 무역 흐름을 지역 수출입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과 동유럽 경제의 부상으로 제조업과 수입 산업에 특화된 독일의 관련 산업에서 상당한 고용 감소가 발생했지만, 수출 지향 산업에 특화된 지역은 훨씬 더 높은 고용 증가와 실업률을 경험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 효과로 44만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나 독일의 제조업 존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 상대로는 중국보다는 동유럽 국가의 성장에 따른 교역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증대가 고용 관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경험과도 일치하여 미래의 통일 한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통일 한국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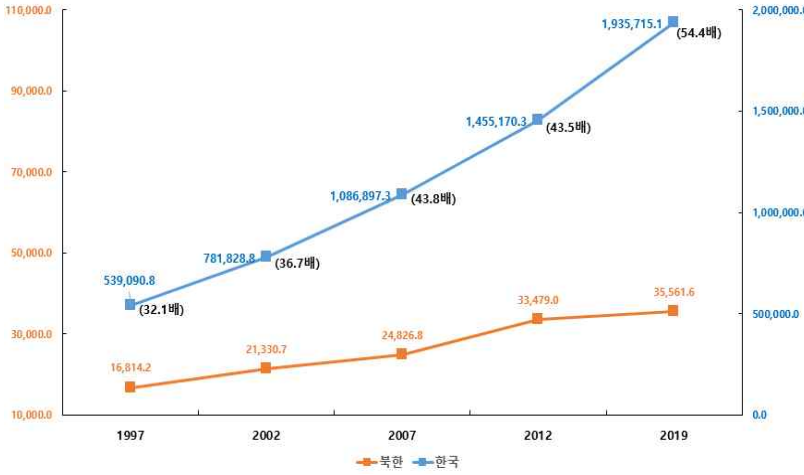
독일통일을 한반도에 적용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초기조건의 차이이다.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해 온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동독 주민은 북한 주민보다는 정치적 자유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다. 동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연금 수혜자들의 경우, 연간 30일 한도 내에서 서독 여행도 가능했다. 통일이 임박해서는 서독의 TV 시청도 허용되었다. 암시장에서는 서독 마르크화도 통용되었다. 지속적인 서독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독 주민의 의식은 변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독의 자유로운 생활과 경제번영을 동경하게 되었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 대해 동경이 있겠지만, 북한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어렵다.

경제적으로는 동서독이 분단되었던 시절보다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의 충격은 독일 사례보다 클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인구 비율도 독일보다 크기 때문에 통일시 소요되는 1인당 비용도 독일 경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도표 20, 21〉 참조). 통일 직전까지도 서독은 동독의 경제가 공산주의권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며, 특히 기초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직면한 동독 경제는 너무 쇠락한 상태였으며, 많은 보고서나 경제통계의 신뢰성도 매우 낮았다.[30]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0)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은 자서전에서 통일 전의 가장 큰 실수는 동독 경제의 현실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이었다고 언급했다. "어떻게 동독 경제력을 오판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자주 질문을 던져 보곤 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헬무트 콜(1998), p. 269.

〈도표 20〉 남북한 국민총생산 비교

단위: 십억 원



자료: https://kosis.kr

〈도표 21〉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비교

단위: 만원



자료: https://kosis.kr

독일통일 초기에 연방정부는 많은 정책적 오류를 경험했다. 연방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동서독 화폐를 고평가된 환율로 교환해 주었다. 당시의 예상으로는 동독 주민들이 동독 DM 대신 서독 DM을 사용하게 되어 물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었지만 동독지역이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독 주민들의 다수는 서독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서독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동독 주민들은 높은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서독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갖는다는 기대 때문에 높은 환율을 선호하였다.[31] 만약 동서독 화폐 간에 다른 환율이 적용되어 동서독 간에 현격한 임금 격차를 유지하였다면 경제통합과 정치적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동서독 화폐교환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동독 화폐의 고평가는 필연적이었다는 견해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의 정치적 결정은 동독자산을 과평가 시켰고,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득은 오히려 동독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32] 예를 들어 환율의 증가 때문에 동독기업의 회계자산이 과평가 되는 경우,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적어도 몇 배의 경상 순이익을 올려야 하지만 고평가된 동독기업의 자산은 대외경쟁력을 상실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매각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대부분 도산하였다.

---

31) 동독지역에서는 높은 환율에 의한 실질소득의 증가는 곧 경쟁력 감소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동유럽 체제 전환 국가 중 폴란드의 경우 오히려 낮은 환율을 고수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32) 화폐교환 후 처음 수개월간은 동독 화폐의 서독 화폐로의 대체효과가 일어나 동독인들의 소비증가에 의한 높은 물가상승률이 기대되었으나 놀랍게도 동독에서의 물가상승률은 낮았다. 반면 동독지역의 경기는 곧 심각한 정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Gerlinde Sinn and Hans-Werner Sinn, *Jumpstart: The Economic Unification of Germany* (Cambridge: The MIT Press, 1992), pp. 52~53.

1. 통일 초기 대응의 중요성

통일 초기 과평가된 동독기업은 대외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자산가치도 과평가 되어 매각도 어려워 대부분 파산하였다. 동독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서독의 이전지출은 주로 동독 주민의 소비를 위한 용도로 배분되었다. 문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소진성 지출로 사용되었다. 당시 연방정부의 소진성(dissipated) 이전지출은 동독 주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민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통일비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되었던 국가재난금과는 다르다. 한국민은 통일 후, 북한의 산업과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여 북한 주민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에 주 관심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이나 연금을 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민이 상정하는 통일비용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이전지출과 유사한 투자재원(investment needs) 개념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통일 관련 지원금이 산업 투자 대신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에 주로 사용된다면 남북한의 생산성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주민의 소득도 남한 주민 대비 매우 적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고려로 동독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동독 경제는 외형상의 발전을 달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독지역의 생산성은 서독지역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두 차례의 연대협약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동독 경제는 심각한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독 경제성장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해보면,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더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신속한 산업 재배치, 남북한 경제협력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동독지역 경제는 서독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난다. 동독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주민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적어지고, 따

라서 많은 동독민들은 사회에 불만을 느끼게 되어, 젊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은 대거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을 북한에 머물게 하는 정책은 향후 통일한국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Heise and Porzio(2020)의 연구는 실제 구동독지역에서 젊은 계층은 경제외적인 이유로도 서독으로 이주하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동독 내에서의 이동과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지역 내에서 이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독지역의 'beacon region'처럼 성도 지역을 설정하여 생산력을 집중하는 정책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특구 지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북한에 체류할 경우, 주택 및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 우선권을 제시할 수도 있고,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 더 많은 사회보장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한국 내에서도 지역경제의 불평등에서 오는 갈등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은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크고 수도권 집중이 높아 지역 간 소득수렴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높은 부동산 가격, 다양한 일자리, 편리하면서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전 지역이 누릴 수는 없다.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통일한국에 적용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2. 통일 대비 충분한 재원확보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독일통일은 한국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 전부터 동서독은 다양한 교류가 있었고, 제한적이었지만 동서독 주민들의 상호방문도 가능했다. 동서독이 서로 상대를 잘 이해하고 있어, 통일이 달성되더라도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리라

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실제 독일의 통일비용은 추정 주체와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을 구동독지역 경제가 계속 고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제로 추정했기 때문이었다.[33] 일반적으로 대략 2조 €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34]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최소 7천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 연방건설교통부의 통일비용 추정액은 총 이전지출액에서 구동독지역에서 조달한 세금과 사회보장금 3천억 €를 제외하면, 서독의 통일비용 순지출액은 약 9천 8백 억 €로 추정하고 있다.[35]

한반도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이 발생한다면, 북한지역에서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발생시켜 상당한 비용이 한국에 전가된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시점은 불확실하므로 한국민의 대부분은 통일비용을 독일식 통일비용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서독이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정부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

동독의 경제가 구소비에트 경제를 기초로 발전하였으나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동독의 경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같은 논리로 북한과 동독을 비교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북한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한 예로 동독의 붕괴 직후 많은 사람이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이는 동독의 경

33) 원윤희. 2015. "독일의 통일비용 재원 조달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 10, 『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p. 118.

34) 피셔(Alexander Fisher)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독의 동독지원 비용을 약 2.1조 €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1.5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2011년. p. 443.

35) 원윤희. 2015. "독일의 통일비용 재원 조달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 10, 『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pp. 20~25.

제가 자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독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대량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정부 재정 이전은 주로 실업보험 수당이나 노후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이었다. 이러한 지출은 서독 정부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동독에 제공할 것을 선택할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독일처럼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지를 못해 동일한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서독의 이전지출이 주로 동독 주민의 소비를 위한 용도로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진성 지출'은 수익을 창출할 이전지출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투자와 달리 '소진성 지출'은 소득을 증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36] 투자가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상당한 양의 '소진형' 이전지출을 시행했는데, 이는 경제외적인 목적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 정부의 재정 이전지출을 참고로 북한을 지원하는 한국의 재정부담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우선은 조세, 국채발행, 외화차입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투자 수요도 높아,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여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액수는 극히 부족하여 대대적인 세수의 확보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독일식

[36] Taejon Han "Notes on the Economic Burden of Korean Unification," in Un-Chul Yang ed.,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n Unification: Agenda Preparation* (Sungnam: The Sejong Institute, 1998), pp. 317~319.

의 북한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설사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으로의 이전지출은 한국의 자본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잉여 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37] 문제는 북한을 지원할 여론이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6년 1,34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민이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지와 예상 기부 금액은 매우 낮다. 설문 대상자의 약 75%가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약 52%가 1년에 5만 원 미만을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통일비용 부담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정부에 대한 불신(30.3%), 현재 세금으로 충분하다는(30,3%) 이유로 들고 있다.[38]

따라서, 북한에 대한 막대한 지원 및 투자재원은 한국의 자체 조달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해도, 통일독일에서 발생한 통일비용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이다. 무작정 정부 부채 증대나 외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이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북한지역에서의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시행되지 않는 한 북한의 산업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아, 북한지원의 재정부담 능력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현시점에서 평가하면, 통일을 대비해서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자원을 국민적 합의로 정한 후,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경제통계 자료를 개방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계속 설득하여,

37) 더욱 엄밀하게 구분하면 독일에서의 이전지출이 통일비용(unification cost)의 성격을 갖는다면 한국에서의 이전지출은 투자소요액(investment needs)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38) "통일한반도 국토 인프라 격차 해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Voice, vol. 03, 2016년 6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지원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정치력의 확보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왜곡된 산업 구조 개선과 인력 재배치

동독의 경제는 자본주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많은 사회주의 유산을 남겼고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우세하였다. 이 결과 동독에서는 탈산업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단기적으로는 수입형의 생산구조를 선호하게 되어 많은 동독기업이 도산하였다. 동독 경제가 비교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투자와 함께 고급인력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진입이 지속해야만 했다. 동독지역은 경제 규모가 작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동독지역이 서독지역과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기업의 자생력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다.

현재 북한도 구동독과 유사한 산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의 많은 국가 기업소들은 자본 부족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생산시설이 낡았으며 가동률도 낮다. 신기술 도입과 활용은 개인 투자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시설은 공해물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은 구동독과 달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군수산업을 경제적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경제가 왜곡되고 있다.[39] 따라서 과감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산업 설비의 자본재 가치가 마이너스의 가치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39] 관련된 논의는 양운철,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세종정책브리프』 2019-22 참조.

구동독지역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독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의 모색과 함께 지역에 합당한 산업 구조를 선별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섬유, 전자 등의 산업을 수입대체 산업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압축 성장을 통한 발전 전략이 성공한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통일 후 북한도 몇 개의 산업 선도 도시를 지정하여 주변의 유휴 노동력을 유인하고 적합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개성을 비롯해 인접한 해주 등과 함께 평양, 남포, 평성, 신의주, 원산, 청진 등 경제적 배후지(hinterland)가 존재하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지역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개발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V. 맺는말

분단 75주년이 지난 한반도는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갑자기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초기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점을 시사한다. 가장 큰 시사점은 서독은 동독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 동독의 산업을 진흥시키려 한 연방정부의 과제는 예상보다 어려웠고,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증가하였다.[40] 추정했던 것보다 낙후된 동독의 산업시설과 운영 현실은 서독이 구상했던 통일 후 동독 재건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통일을 대비하여 극도로 폐쇄된 북한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독일통일 초기,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막대한 재정 이전을 통해 지원했지만, 동독지역 주민 대다수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패배자 또는 이류 시민이라는 심리적 열등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독일통일 초기에는 구동독지역에서의 대량 실업을 포함한 경제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거보다 개선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고 지역 경제가 부흥하면서 구동독 주민들은 총량 면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적극적

40) 특히, 신연방주들의 부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독지역 주들도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서독의 3개 주는 주 사이의 재정조정 배분 방식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 결과 구동독 주들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재정조정 시스템을 시행한 연대협약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으로 홍보한다면 상대적 박탈감도 감소할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효율과 형평의 상충 문제는 동독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일부 서독 주민의 반발 문제이지, 중국이나 동유럽에서 나타난 극명한 빈부 차이와는 다르다. 북한 주민보다는 한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주는 경제적 이득도 매우 크다. 한국을 방문했던 쾰러(Horst Köhler) 전 독일 대통령은 한국이 통일의 재정적 부담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독일인들이 오늘날 유럽의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41] 통일이 다가온다면 한국으로서는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여,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불신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국력 상승으로 독일의 통일 방식을 수용할 준비와 능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제재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시행하여 열린 자세로 남북회담과 남북한 협력사업을 재개해야만 한다. 북한의 생존 방법은 핵 보유가 아니라 체제 이행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이다. 북한의 체제 이행이 성공하려면 자체 개혁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이 발생하더라도 형평성에 기초한 경제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남북한과 동서독의 초기조건을 비교하여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41)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의 한국 경제4단체 주최 오찬사 내용. 2020년 2월 9일.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달원. 2014. “독일의 지역 간 소득수렴에 관한 연구: 근로자 1인당 실질 GDP를 중심으로.”『경상논총』, 32권 2호.

국가안전기획부. 1997.『독일통일모델과 통독 후유증』.

국가정보원. 2009.『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_____. 2017.『통계로 보는 독일통일』.

김경래. 2019. “통일독일 30년: 동서독 소득격차와 동독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한독사회과학논총』, 29권 4호.

김경래. 2019. “통일독일 30년: 동서독 소득격차와 동독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한독사회과학논총』, 29권 4호.

김동열. 조호정. 2012. “구동독지역의 경제활성화 성공 사례와 시사점.”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상철. 2014. “독일 아젠다 2010 평가와 전망.”『질서경제저널』17권 2호.

_____. 2019.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질서경제저널』22권 2호.

김영희. 2018. “김정은 집권이후 기업관리운영체계 변화 연구.”『KDB북한개발』, 14.

김윤애. 2018. “전환기의 북한: 국유화의 사영화·민영화.”『북한』, 9월호.

김창권. 2014.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 및 연구 동향.”『KDI 북한경제리뷰』5월호.

_____. 2018.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경상논총』, 36권 2호.

나정원. 2018. “진화하는 북한 기업가들.”『북한』, 7월호.

베르너 바이덴펠트·칼루돌프 코르테 편저, 임종헌·신현기·백경학·배정한·최필준 번역. 1998.『독일통일백서』, 한겨레신문사.

신성원. 2014. “통일 전후 독일 경제 상황과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양운철. 2015.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기업소 사유화 방안.” 이장로·김병연·양운철 공편,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과 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양창석. 2011.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늘품플러스.
염돈재. 2011.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자유기업원 『CFE Report』, 166호.
우베 뮐러(Uwe Müller), 이봉기 번역. 2006. 『대재앙 통일』, 문학세계사.
원윤희. 2015. “독일의 통일비용 재원조달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 10, 『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이상만 외, 2014. 『이제는 통일이다』, 헤럴드경제.
이상준. 2020. “통일 30년, 독일의 교훈.” 『미래의 한반도』 제467호, 국토연구원.
이석. 2020.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
이은정 · 에버하드 홀트만(Everhard Holtman). 2020.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독일통일총서 30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임수호. 2019.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49호.
정재각·허준영. 2018.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이주와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 25, 『이주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정형곤. 2020.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23, 9월 28일.
최수영. 2014.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통일부. 2013.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3.
_____. 2016. 『사회복지 • 연금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13.

_____. 2016.『노동・실업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14.
_____. 2018.『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26.
_____. 2019.『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총서 30.
평화문제연구소. 2011.『독일 분단을 넘어 초일류로』, 주한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수출입은행. 2011.『독일통일실태보고서: 독일연방하원 앙케이드위원회 보고서』, 11월. 한승완. 2020. "2019년 독일 장벽붕괴 30년의 변화와 전망."『INSS 전략보고』55호.
헬무트 콜(Helmut Kohl), 김주일 옮김. 1998.『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해냄출판사.
R. H. Hasse, H. Schneider and K. Weigelt. 2005.『라인강 기적을 일궈낸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정책 A에서 Z까지』, 주한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해외자료

Acemoglu, D. 2009.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Allen, K. 1989. "Directing Foreign Investments to Eastern Germany: Swiss Engagements after (and before) 1989," *Central European History* 53, pp. 168~199.
Andor, L. 2019. "Fifteen Years of Convergence: East-West Imbalance and What the EU Should Do About it," Intereconomics 2019.
_____. 2019. "The Fall of the Iron Curtain: 30 Years On," *Intereconomics* 2019.
Apolte, T. 2012. "Why Is There No Revolution in North Korea?" *Public Choice*, 150(3/4), pp. 561~578.
Baskaran, T. 2019. "Fiscal Interactions in the Short and the Long Run: Evidence from German Reunific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0(3), pp. 711~732.

Becker. S., Mergele S., and L. Woessmann. 2020. "The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of Germany: Rethinking a Natural Experiment Interpretation of the Enduring Effects of Commun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2), pp. 143~171.

Boltho. A., Carlin. W., and P. Scaramozzino. 1997. "Will East Germany Become a New Mezzogiorno?"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4(3), pp. 241~264.

Boltho. A., Carlin. W, and P. Scaramozzino. 2018. "Why East Germany did not become a New Mezzogiorno,"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1), pp. 308~325.

Bolton. P, Roland. G., and E. Spolaore. 1996. "Economic Theories of the Break-up and Integration Theory, *European Economic Review*, 40(3-5), pp. 697~705.

Bromley, J. 2017. *German Reunification*, London: Routledge.

Burda. M., and Severgnini. B. 2018. "Total Factor Productivity Convergence in German States since Reunification: Evidence and Explanation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1), pp. 192~211.

C4ADS and the Sejong Institute. 2017. *The Forex Effect: US Dollars, Overseas Networks, and Illicit North Korean Finance.*

_____. 2017. *Risky Business: A System-Leve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Proliferation Financing System.*

_____. 2018. *Dispatched: Mapping Overseas Forced Labor in North Korea's Proliferation Finance System.*

Comerford. D, and J. Mora. 2019. "The Gains from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Policy* 34(98), pp. 201~266.

Dauth. W, Findeisen. S, and J. Suedekum. 2014. "The Rise of the East and the Far East: German Labor Markets and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2(6), pp. 1643~1675.

Eickelpasch, A. 2015. "Structural Differences at the Root of East-West Gap in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DIW Economic Bulletin* 41, 5(31), pp. 541~552.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the New Federal State. 2019. *Annual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the Status of German Unity*, 2019.

Grabowski. R. 1994. "Import Substitution, Export Promotion, and the State in Econom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28(4), pp. 535~554.

Grossmann. V, Schafer. A, Steger. T, and B. Fuchs. 2017. "Reversal of Migration Flows: A Fresh Look at the German Reunif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9, pp. 1~15.

Gürtzgen, N and A. Diegmann (ne Nolte), 2020. "Does Low-pay Persist across Different Regimes? Evidence from German Unification," *Economics of Trans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28, pp. 413~440. https://doi.org/10.1111/ecot.12244.

Heise, S. and T. Porzio, 2020. "Why East Germans Are Not Taking Advantage of the Large Wage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CEPR, February 29, 2020.

Hochberg. A, and J. Holscher. 1998. *East Germany's Economic Development since Unification: Domestic and Global Aspects*, Houndmills, Basingstoke: Miamillan.

Jacobi. W. 2020. "Surplus Germany," *Journal of German Politics*, 29(3), 2020.

Kluge. J, and M. Weber. 2018. "Decomposing the German East-West Wage Gap," *Economics of Transition*, 26(1), pp. 92~125.

Kolling, A. 2016. "Developing Eastern Germany: The Effects of Economics Promotion in the Eastern German States after Reunification,"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36(2), pp.

275~295.
Lang, T. 2012. "Shrinkage, Metropolization and Peripheralization in East Germany," *European Planning Studies*, 20(10), pp. 1747~1754.
Langhammer. R, Lechthaler. W, Rietz. S, and M. Tesfaselassie. 2017. "Germany Priortizes the Long-term Goal of Sustainability over the Short-term Goal of Revitalizing the World Economy," In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Working Papers 17.
OECD. 2018. "2018 OECD Economic Survey of Germany: Sustaining Strong and Inclusive Growth," June 12, 2018.
Peichl. A, and M. Ungerer. 2016. "Equality of Opportunity: East versus West Germany,"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69(4).
Prantl S. and A. Spitz-Oener. 2020.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Competiting Natives' Wages: Evidence from German Unific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2(1), pp. 79~97.
Ragnitz, J. 2019. "Thirty Years after the Berlin Wall Came Down: Economic Transition Completed, but Structural Deficit Remains," *info DICE Report*, 17(3), pp. 22~27.
Schmithals, J. 2010. "Return Migration to East Germany: Motives and Potential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omas Salzmann, Barry Edmonston and James Raymer edited *Demographic Aspects of Migratio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Sinn, G. and H-W Sinn. 1992. *Jumpstart: The Economic Unification of Germany,* The MIT Press.
Strubelt, W. "Policy Lessons from the Reconstruction of East Germany: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Gorzelak. G, Bachtler. J, and Smetkowski. M. edited *Regional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evelopment Processes and Policy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Ünal, E.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ort Growth in Turkey and China through Macro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Evolutionary and Institutional Economics Review*, 13(1), pp 57~91.

Vogt. T, and F. Kluge. 2015. "Income Source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Different Regimes: The Case of East Germany's Transformation," *Demographic Research*, 33(41), pp. 1153~1163.

Wagner, J. 2016. "Still Different After All These Years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of Exports in East and West German Manufacturing Enterprises,"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36(2), pp. 297~322.

Yang, U.. 2010. "Twenty Years of German Unification: Lessons for South Korea," *Sejong Policy Studies*, vol 6. No. 2, 2010.

Yang, U. 2018. "The Ongoing Contest between the Plan and Market in North Korea," in Un-Chul Yang edited *Whither North Korea?* The Sejong Institute.

Yang, U. 2019. "Unavoidabl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From Self-reliance to Symbiosis," in Un-Chul Yang edited *North Korea Conundrum,* The Sejong Institute.

Yun, M. 2003. "A Simple Solution to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IDZ Discussion Paper 836.

해외언론 자료

AP, "30 Years after Berlin Wall fell, East-West divides remain," November 4, 2019.

Economist, "Thirty Years after the Berlin Wall Fell," October 31, 2019.

Economist, "Why East and West German Women Still Work Vastly Different Hours," October 3, 2020.

Financial Times, "East Germany's Economy Struggles to Catch Up with the West," August 28, 2019.
Financial Times, "Lingering Divide: Why East and West Germany Are Drifting Apart," August 29, 2019.
Financial Times, "Many East Germans See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September 26, 2019.
Fortune, "Germany Still Faces East-West Divides As Economic Troubles Loom," November 12, 2019.
Pew Research Center, "How the Attitutes of West and East Germans Compare, 30 Years after Fall of Berlin Wall," October 18, 2019.
Reuters, "Thirty Years after It Fell, the Berlin Wall Still Divides Germans," October 24, 2019.
The Conversation, "How Division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Persist 30 Years after Reunification," November 9, 2019.
The New York Times, "30 Years After Reunification, Germany Is Still Two Countries," August 29, 2019.